

전남도, 타르 남해안 확산 저지 총력

사리·복서풍 변수... 울돌목서 차단하라

‘타르 확산을 울돌목서 차단할 수 있을까?’ 전남도는 울돌목에서 더 이상의 확산을 저지한다는 목표 아래 타르 덩어리 확산 저지에 사력을 다 하고 있으나 사리기간, 복서풍 등 여 파가 미치지 않을까 전전긍긍하고 있다.

충남 태안 앞바다 원유 유출 사고로 전남지역 해안의 수산피해 면적이 날로 커져 2만2천ha가 넘는 것으로 집계된 가운데 조수간만 차가 큰 사리 기간(7일~10일)이 되면서 타르의 추가 유입이 크게 우려되고 있기 때문이다.

또 복서풍이 계속 확장되고 있는 상황여서 타르의 서해안으로의 추가 유입은 물론 남해안으로 확산마저 불가피할 것으로 보여 방제당국이 긴장하고 있는 것이다.

7일 전남도에 따르면 사리 첫날인 이날은 바람이 약했을 뿐만 아니라 파고도 낮고, 물살도 약해 타르가 서해안이나 남해안으로 거의 유입되지 않았다.

그러나 8일부터 10일까지는 물살과 바람이 세지고 파고도 높아져 상당량의 타르가 남해안으로 유입될 수 있을 것으로 보고 있다.

목표항 최고수위는 지난 5일 낮 12시26분께 3m76cm, 6일 오후 1시 12분 3m95cm를 기록했다.

사리가 시작되는 7일 오후 1시52분께 최고 수위는 4m11cm, 8일 오후 2시29분께는 4m23cm, 9일 오후 3시16분께는 4m31cm까지 최고로 상승한다.

오일펜스·그물망 설치 양식장 진입 차단

해경 공동 해상 방제·예찰 활동 강화

이후 10일 오후 3시42분께 4m35cm로 최고 수위를 기록한 뒤 11일부터는 점차 낮아진다. 이 때문에 사리 기간에는 해안을 뒤흔 타르나 인근 바다에 떠 있는 타르 덩어리가 조류의 영향을 받아 5~6km 연안 바다 내에서 확산될 가능성이 큰 실정이다.

특히 환경전문가들은 오는 3월까지 복서풍이 계속 확장돼 외해에 떠 있는 타르나 바닥에 가라앉은 타르가 부유해 추가로 유입될 가능성이 높을 것으로 분석하고 있다.

이에 따라 전남도와 해경은 7일 전남 서남해안 양식장 타르 유입을 막기 위해 주요 해역에 오일펜스와 그물망을 설치하는 등 방제에 총력을 기울이고 있다.

전남도와 해경은 합평만 입구에 오일펜스 600m와 그물망 700m를 설치해 타르의 양식장 진입을 차단하고 있으며, 신안해역에도 그물망 1천m를 설치한 상태다.

진도 서남해안 설치하려던 오일펜스 1천800m는 타르에 오염되지 않은 남해안의 김 마저 오염된 것으로 오인된 것으로 오해받을 것을 우려한 어민들의 반대에 부딪혀 1천m 구간이 설치되지 못했으나 이날 오후

주민들의 동의에 따라 설치 작업이 모두 마무리되기도 했다.

이와 함께 전남도는 국내 최대 김 양식장인 진도와 해남을 지나 완도로 가는 길목인 명량수로 부근에 오일펜스나 그물망 설치 여부를 검토했으나 물살이 너무 강해 설치를 포기했다.

한편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전남의 양식 김 생산량(5만6천톤)은 완도가 1만2천700톤으로 가장 많고 해남이 1만2천200톤, 진도 1만5천 등이다. 이번에 타르 피해를 입은 서해안은 전남 생산량의 20%가량을 차지하고 있으며, 이중 10% 가량은 이미 수확을 한 상태여서 서울 전남의 김 총생산량은 10% 가량 줄어든 전망이다.

전남도 관계자는 “사리 기간이 걱정되기는 하지만 남해안으로의 타르 유입은 울돌목에서 상당 부분 차단되는 등 별다른 유입은 없을 것으로 보고 있다”면서 “주요 해역에 오일펜스를 설치하는 한편 만일의 사태에 대비해 목포 해경과 함께 해상 방제 및 예찰 활동을 강화하고 있다”고 말했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7일 오후 신안군 지도읍 어의도에서 주민들이 해안 절벽 사이로 밀려 들어온 타르덩어리를 치우고 있다. 신안군 섬지역에는 자원봉사자들의 손길이 미치지 못해 방제작업이 거의 이루어지지 않고 있다. /최한배기자 choi@kwangju.co.kr

‘이명박 시대’ 지역현안·공약 점검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 조성

기술·시설·장비·인력 인프라 집적화 급선무

최근 지구온난화 해결을 위한 온실가스 감축 등 기후변화협약 발효에 따라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이 시급한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햇빛·물·생물유기체 등을 포함하는 재생가능한 에너지를 변환시켜 이용하는 신재생에너지는 태양열·풍력·수력·연료전지·바이오 에너지 등이 대표적이다. 이 가운데 광주가 주목하는 것은 태양광과 수소연료전지다.

광주는 ‘빛고을’이란 이름에 걸맞게 하루 평균 일사량이 m당 5천394kcal로, 전국 평균 4천441kcal보다 21%나 많다.

이같은 천혜의 여건을 살려 광주시는 2001년 ‘태양에너지도시’ 건설계획을 수립해 현재까지 1천

은 점에 주목한 듯하다. 이 당시는 “한전 본사 이전에 맞춰 광주에 신재생에너지 복합단지를 조성하겠다”고 공약했다. 태양에너지산업을 특화하여 핵심·응용 산업으로 확대 육성하고 기술개발과 생산체제 개선, 기업지원 체계 구축을 통해 지역내 전략산업으로 발전시키겠다는 약속이었다.

하지만 국내 신재생에너지산업은 걸음마 단계여서 활성화까지는 갈 길이 멀다. 기술개발 투자 누적액(1990~2004년)은 미국의 4%, 일본의 6.5%에 불과하며 기술력도 미·일 등 선진국의 절반 수준이다. ‘신재생에너지 메카’로 급부상하고 있는 광주의 신

재생에너지 공급량은 전체 에너지 사용량의 1.96%에 머물고 있다.

따라서 신재생에너지산업

태양에너지 산업 특화·전략산업 육성

사업비 조달·국비 지원 확대 과제

544억원을 투입, 시청사 주차장을 비롯 540여개소에 3천700kW의 태양광과 서구문화센터 등 7천500여개소에 태양열 급탕시설을 보급, 태양에너지 설비에서 전국 최고 수준에 도달했다.

시는 또한 전국 최초의 태양에너지 도시조례 제정에 이어 조선대 부지 1만6천여㎡에 태양에너지실증연구단지를 조성하는 등 인적·물적 인프라를 확실히 구축해왔다.

조선대병원에는 연료전지(250kW) 발전 시설을 설치하는 등 미래 수소경제(Hydrogen Economy)시대에도 대비하고 있다.

때마침 국내 최대 에너지 기관인 한전이 나주 공동혁신도시로 이전할 예정이어서 광주는 미래 고부가가치산업인 신재생에너지 산업을 선점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를 맞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같은

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시설·장비·인력 인프라의 집적화가 급선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전력 이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신재생·수소연료전지 특구단지’를 조성, 설비의 실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결과를 내놓았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것도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과 공동으로 2008년부터 5년동안 에너지클러스터 및 신에너지 비즈니스센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4개 분야에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는 로드맵을 작성했다. 이를 포함 사업비의 효율적인 조달과 국비 지원 확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같은

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시설·장비·인력 인프라의 집적화가 급선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전력 이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신재생·수소연료전지 특구단지’를 조성, 설비의 실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결과를 내놓았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것도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광주시는 신재생에너지산업 육성을 위해 한전과 공동으로 2008년부터 5년동안 에너지클러스터 및 신에너지 비즈니스센터 구축과 신재생에너지 보급 지원 등 4개 분야에 4천800억원을 투입한다는 로드맵을 작성했다. 이를 포함 사업비의 효율적인 조달과 국비 지원 확대도 과제로 떠오르고 있다.

이명박 대통령 당선인도 이같은

을 지역경제를 선도할 미래산업을 육성하기 위해서는 기술개발과 이를 뒷받침할 시설·장비·인력 인프라의 집적화가 급선무다. 한국에너지기술연구원은 지난해 9월 한국전력 이전의 파급효과를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국가차원에서 ‘신재생·수소연료전지 특구단지’를 조성, 설비의 실용화를 추진해야 한다는 의견 결과를 내놓았다. 태양광발전 설비의 초기 투자비용을 낮추는 것도 상용화를 위해 풀어야 할 숙제다.

“삼성重 사장 구속·해수부장관 파면하라”

전남 환경단체·어민, 재해지역 확대 지정 촉구

전남지역 환경단체와 어민들은 7일 충남 태안 앞바다 기름유출 사고와 방제실패 책임을 물어 삼성중공업 사장 구속과 해양수산부장관·해양경찰청장 파면 등을 요구했다.

전남환경운동연합과 환경운동연합 바다위원회, 무안·신안·영광군 어민대표 등 10여명은 이날 오전 전남도청 앞에서 ‘태안 유조선 사고의 전남·제주 서남해안 오염 확산에 따른 긴급 기자회견’을 갖고 책임자 처벌을 촉구했다.

환경·어민단체 대표들은 “태안

에서 발생한 유조선 사고로 다량의 원유가 전남·북지역을 덮쳐 대부분의 섬과 해안가를 크게 오염시키고 있다”면서 “방제실패로 오염을 확산시킨 해양수산부 장관과 해양경찰청장을 즉각 해임하고 전남·

북 및 제주도 등 오염확대지역을 국가재해지역으로 확대지정하라”고 요구했다.

이들은 “항공기와 선박을 이용해 유화제를 부적절하게 과잉살포하면서 큰 기름덩어리가 작은 덩어

리로 깨지는 등 오염 확산을 부채질했다”며 “전남 해안의 굴 양식장과 전국 생산량의 70%를 차지하고 있는 김 양식장이 크게 오염돼 피해어민들이 분노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들은 또 “사상 초유의 환경재앙을 일으키고도 사고선박 일지를 조작하고 변호사를 동원해 로비를 일삼는 삼성그룹을 규탄한다”며 “최악의 환경재앙을 일으킨 삼성중공업 사장을 구속 처벌할 것”을 촉구했다.

환경·어민단체 대표들은 이어 “모든 피해보상에 대해 국가가 선보상하고 삼성과 현대 등 원인 제공 기업들에게 비용을 징수하는 구상권을 발동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채희중기자 chae@kwangju.co.kr

100년만의 사랑 - 부채표
동화약품

“저도 까스활명수
좋은거 다 알아요!!”

겁다고 뒤든지 다 소화시키는거 아니잖아요.
속이 더부룩하고 답답하고...
저는 그럴 땐 까스활명수만 마셔요.
소화에 좋은 11가지 생약성분까지 있으니까 -
부채표 까스활명수 좋은거 저희도 다 알아요

11가지 생약성분 소화제 - 부채표 까스활명수큐!

부채표가 없는 것은 활명수가 아닙니다!
소화를 돕는 까스활명수의 11가지 생약성분 : 아산화, 고추틴크, 계피, 육두구, 현호색, 정향, 창출, 건강, L-Menthol, 진피, 후박

[부작용이 있을 수 있으니 섭취량 '사용상의 주의사항'을 잘 읽고, 의사·약사의 상의하십시오.] [광고심의번호 028-0200]

11가지 생약성분 - 부채표 **까스활명수**큐